

A Study on the Public Role of Religions and the Education of 'Catholic Citizenship'

Kyunghoon Hwang^{*}

Woori Theology Institute

Abstract

PURPOSE As revealed in the recent issue of sexual abuse by priests in Catholic churches in the world, it is clear that religion must exist for the public interest and move toward emphasizing and strengthening its public role. Regarding this matter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at Catholics should cultivate “Catholic Citizenship” and “Catholic Citizenship Education” is necessary to achieve this.

CONTENTS For this the paper tries to find how the church understands its public role in the documents on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Catholic Social Teachings as a theoretical basis for Catholic citizenship education. Also “Asian public theology” is presented as a possible methodology.

RESULTS Based on this theoretical study, the case studies of Justice and Peace Committee of the Seoul archdiocese and the Woori Theology Institute are presented as a possibility in the context of Catholic citizenship education. In particular, the former’s “Social Doctrine School” and the latter’s “Monthly Zoom Seminar” are an appropriate education to cultivate Catholic citizenship in terms of diversity, openness, and “Public Sphere.”

KEY WORDS Catholic Citizenship, Catholic Citizenship Education, Social Doctrine, Asian Public Theology, Justice and Peace Committee, Woori Theology Institute

^{*} **Corresponding to** Kyunghoon Hwang (Senior Researcher, Woori Theology Institute)
E-mail : capaul21@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종교의 공적 역할과 '가톨릭 시민'교육 탐구

황경훈

우리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요 약

연구 목적 본고는 코로나19와 최근 성직자의 성학대 문제가 암시하듯이 종교는 무엇보다 공익이라는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며 종교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 아래 본고의 목표는 우선 가톨릭 신도는 좋은 신자임과 동시에 좋은 시민이라는 '가톨릭 시민성'을 함양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가톨릭 시민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연구 내용 이와 관련해 본고는 가톨릭 시민교육의 이론적 토대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및 가톨릭 사회교리 문헌에서 교회의 공공성 또는 공적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근거를 찾아 밝혔다. 동시에 '아시아 공공신학'(Asian public theology)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가능한 방법론이자 참고할 만한 이론으로 제시했다.

결론 이러한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우리신학연구소의 교육 사례를 가톨릭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평위의 '사회교리학교'와 우신연의 '월례준세미나' 교육은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다양성, 공개성, 공론장 형성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가톨릭 시민성을 함양할 적절한 교육임을 밝혔다.

주제어 가톨릭 시민성, 가톨릭 시민교육, 사회교리, 아시아 공공신학, 정의평화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I. 서 론

주지하다시피 근래 들어 여러 분야에서 공공성 관련 담론들이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고 그에 힘입어 종교계에서도 종교의 공공성 또는 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스도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신교에 이어 가톨릭에서도 조금씩 종교성과 공공성, 시민성(citizenship), 또 시민교육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도 크게 봐서 그러한 연구의 하나다. 글의 제목에서 보이듯 종교의 공적 역할과 ‘가톨릭 시민성’ 또는 ‘가톨릭 시민교육’을 살피고 그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중세와 근대의 승리주의적 또는 식민주의적 크리스텐덤(Christendom)의 세계관을 전체 교회 차원에서 거부하고 ‘교회쇄신’과 ‘세상과의 대화’를 선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공의회로 줄임)에서 가톨릭 교회의 공공성 또는 공적 역할의 내적 기원을 찾고자 했다. 또한 공공성의 외적인 요청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전 세계로 확산된 성직자에 의한 성학대 문제를 짚고 교회의 공공성은 교회 개혁을 수반하는 내적 과제도 아울러 갖는 것임을 밝혔다. 이 문제는 마치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지목된 사례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의 공공선(public good)에 반하는 집단으로서 시민성을 후퇴시키는 부정적 실례와 비슷하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의 공공성과 신도의 시민성이 공의회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 전통에 뿌리를 둔 것임을 사회교리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폈다. 교회의 공적 역할과 시민성에 대한 강조가 사회교리에서 맹아적 형태로 제시되었다면, ‘아시아 공공신학’(Asian public theology)에서는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를 제시하는 한 방법론이자 공공성 담론을 확산하는 신학이론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론의 핵심 부분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와 우리 신학연구소(이하 우신연)의 사례를 가톨릭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살피면서 그 가능성을 탐색했다. 특히 정평위의 ‘사회교리학교’와 우신연의 ‘월례쑈세미나’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살피고 이를 다양성, 공개성, 공론장 형성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전망을 내다보았다.

이 논문은 가톨릭의 공공성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를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신앙인은 좋은 시민’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출발한다. 이 전제와 관련해 종교성과 시민성의 관계를 무조건 긍정하지 않고 이를 여러 각도에서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테면 이 둘이 양립가능한지 아닌지, 또 양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지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Jo, 2022: 45-47). 이 방면의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고 종교성과 시민성의 관계를 전제에서부터 살피고 있는 이러한 연구는 긴요하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또 연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종교성이나 근대성에 대한 탈식민주의 시각을 유념하면서 ‘버리기와 수용하기’(abandoning and embracing)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언급한 개념들이 서구적 기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일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서

구적이어야 할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다양한 종교성, 근대성, 시민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밝힌다(Lee, 2020: 29-47).

II. 종교의 공공성과 가톨릭 교회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무수하고 그만큼 관점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이 무엇인지 또 쓰임새는 어떠한지에 대한 범주를 일정하게나마 제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필자는 공공성을 세 차원, 곧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특성으로 바라보는 사회학적 관점에 동의한다(Jo & Hong, 2013: 11-13).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공민성(公民性)에서는 공적 시민 또는 공민이 공공성의 주체로서 추구하는 민주적 성취의 수준을 의미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공민성은 공공성의 정치적 차원, 곧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의 수준, 민주적 결정과 민주적 참여의 수준, 민주적 자아의 실현을 체감하는 수준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공민성이 시민의 민주주의적 덕성의 문제라면 공익성(公益性)은 물적 자원의 공유성, 곧 한 사회의 물적 자원이 어떤 수준에서 공유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는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다양한 제도와 범규범이 실행되는 수준으로 드러난다. 또한 공개성(公開性)은 공론장(public sphere)의 의사소통에 있어 행위의 개방성과 관련된다. 곧 의사소통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공론장의 개방성이 공개성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특정 사회의 대내외적 소통 수준이 공개성의 수준을 말해주며, 사회구성영역과 공적 제도는 그 자체가 공론장 형식을 띠지만 실제 운영 및 행위에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특정 시대의 공공성은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요소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작동하는 각각의 수준이 결합된 일종의 복합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공공성의 사회학적 정의를 받아들이며 종교적, 신학적 의미로 보완한다.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서 말하는 공공성은 위에서 언급한 개념과 다르지 않지만 신학적 언어와 문법, 논의와 담론이 더해진다. 공공신학에서 공공성은 복음, 교회, 신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영역인 공적 삶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곧 공적 삶 속에서 교회의 위치와 사회적 형식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주로 다룬다(Choi, 2019: 27-31). 공공신학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으면서 국가나 시민사회의 필요에 응답하고 도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자료와 대화한다. 가톨릭에서 처음으로 공공신학을 논의한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에 따르면, 공공신학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제기되는 필요나 문제에 응답할 뿐 아니라, 사회, 대학(신학교), 교회라는 세 공적 영역에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신학적 통찰을 번역하여 전달하는 작업이다. 수많은 민족의 소통과 교류가 더욱 빈번해진 지구화 시대에 공공신학의 역할이 도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면, 시민사회에서 공공신

학의 참여와 연대는 어떻게 구체성을 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답해야 한다(Seong, 2019: 98).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공공성

가톨릭 교회와 공공성의 연계는 이어서 살펴보게 될 가톨릭 사회윤리(Catholic Social Teachings or Doctrines), 곧 ‘사회교리’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세상과의 대화와 교회의 ‘현대 세계에 대한 적응’(Aggiornamento)을 기본정신으로 개척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확고하게 교회의 공적 역할과 세계성 및 시민정신이 표현되었다. 특히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이하 『사목헌장』)¹⁾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 문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위해 있음을 첫 구절에서부터 잘 보여준다.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 따라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1항: 383).

이 문헌에는 공공선(public good)의 가톨릭적 표현인 공동선(common good)²⁾을 요한 23세에 의지해 개인과 집단의 견지에서, 또 이들의 권리와 책임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곧 공동선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 완성을 충만하고 더 용이하게 추구하게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로 보면서 그와 동시에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26항: 439)이라고 밝힌다. 또한 이 문헌에서는 공동선과 사회적 연대를 직접 언급하는 구절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에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인간의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단체들을 밀어 주고 도와 줌으로써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더욱더 잘 이행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회적 연대 책임을 현대인의 주요 의무로 여기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세계가 하나로 결합될수록 더욱 분명히 인간의 임무도 개별 집단을 뛰어넘어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각 개인과 개별 단체들이 스스로 도덕적 사회적 덕을 닦고 그 덕행을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30항: 447).

-
-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383-607. 인용문 중 강조는 필자. 이하 본문에는 항과 쪽수만 표시.
- 2) 『사목헌장』에서 공동선(common good)은 35회, 시민(citizen)은 18회, 시민교육(citizen formation or civil education)은 2회 등장한다.

이어 69항과 85항에서는 창조된 재화의 공공적 본성을 일깨우면서 이 본성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앞서 살핀 공공성 개념 중 ‘공익성’에 해당되며 가톨릭적 공공성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논의와 부합한다고 보인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언제나 재화의 이 보편적 목적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69항: 547-548).

현대 “인류의 유대 관계는 국제 분야에서도 더욱 광범한 국제 협력의 확립을 요구”한다. 거의 모든 민족이 독립은 하였지만, 극심한 불평등과 온갖 형태의 부당한 종속에서 해방되고 심각한 내부 곤경의 온갖 위협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이다....“세계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면, 과도한 이윤 추구, 국가적 야심, 정치적 지배욕, 군사적 계산, 이념의 선전과 강요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85항: 591).

이 구절들은 신학적인 접근을 통해 창조된 재화가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보편목적성을 명심해야 하며, 또 재화 사용자는 사물을 사적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나아가 온갖 불평등이 판치고 있으므로 지나친 이윤 추구나 정치적 지배욕 등을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주문한다. 그러니까 재화의 공공적 사용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정의롭고 공정한 분배를 통한 세계 경제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데서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자기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 공공신학’을 주창한 펠릭스 윌프레드(Felix Wilfred)는 공의회의 가장 큰 공헌 가운데 하나로 교회로 하여금 개방성의 정신에 입각해 현대 세계의 현실과 관계를 맺도록 추동한 점을 꼽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의회가 교회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윌프레드는 아시아 공공신학이 공의회 문헌, 특히 『사목헌장』을 포함해 사회교리라고 부르는 가톨릭 사회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사회교리를 통해 여러 종교에서 습관적으로 쓰일 만큼 일상화 되다시피 한 정신과 물질, 성스러움과 속됨이라는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교리가 국경이나 경계를 넘어 공적 주제나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Wilfred, 2010: 194). 윌프레드가 1항의 첫 구절부터 잘 드러난다고 본 공의회의 세상성, 국제성, 공공성을 ‘시민’과 ‘시민교육’ 또는 가톨릭 시민과의 연관성 속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자.

공의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상 국가와 지상 국가의 시민(citizens)”으로서 복음의 정신에 따라 현세의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도록 권고한다. …… “자기의 현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은 물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또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위협에 빠트린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목수 일을 하였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인간적, 가정적, 직업적, 학문적 또는 기술적 노력을 종교적 가치와 결부시켜 활력에 찬 하나의 종합을 이루어 자기의 온갖 현세 활동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다. …… 개인이든 집단이든 “평신도들은 세상의 시민(citizens)으로서 행동”할 때에 각 분야의 고유한 법칙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3항: 477-478)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 투표를 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고유 소명을 의식하여야 한다. 확고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공동선의 함양에 진력하여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시민 교육과 정치 훈련(civic and political formation)”은 오늘날 국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하므로, 모든 국민이 정치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꾸준히 배려하여야 한다.”(75항: 563, 567)

43항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목헌장』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 논문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종교인은 좋은 시민’이라는 명제를 공식적이고 대표적인 가톨릭 문헌에서 확인한다. 곧 위에서 언급한 ‘시민의 현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종교적 의무도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표현이 그것이다. 이 항은 공공성이 어떻게 시민성과 만나고 확장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어 75항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공선을 위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정치 공동체 생활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배려해야 함을 명시한다. 43항이 좋은 종교인은 좋은 시민이어야 한다는, 그 관계에 대한 본성을 규정하고 이를 신학화하고 있다면, 75항은 그것의 목표인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시민교육과 훈련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가톨릭 교회와 성학대 스캔들

가톨릭 교회의 공공성 또는 공적 역할이 제기되는 외적 맥락으로서, 다시 말해 이미 사회문제화 되었고 또 이로 인해 교회가 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의 외부적 상황으로서, 전 세계적 문제로 확대된 성직자에 의한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문제를 살펴보자. 2015년 이 문제를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Spotlight)의 상영과 아카데미상 수상은 가톨릭 교회 내의 성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미국 보스턴의 지역 언론인 <보스턴 글로브> (The Boston Globe)가 한 사제의 성범죄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사제들이 연루되었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세상에 공개했다. 이 보도로 그간 간헐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일파만파로 건잡을 수 없게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2018년 8월 펜실베이니아 대배심에 따르면 지난 70년 동안 펜실베이니아주 6개 교구의 사제 300여명이 1000여명의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교회 내의 조직적 은폐도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은폐와 연루된 혐의를 받던 워싱턴 대교구 도널드 우얼(Donald Wuerl) 대주교의 사퇴를 받아들였다. 우얼 추기경은 아동 성학대로 사퇴한 보스턴 대교구장 버나드 로(Bernard Law) 추기경에 이어 불명예 사퇴한 두 번째 미국 추기경이 되었다(Yeonhap, 2018.10.12). 이 같은 미국 교회의 성학대 사태는 신뢰의 급격한 실추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가톨릭 교회에 위기를 불러왔으며 그만큼 교회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교회 상황도 비슷하다. 2018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68년 동안 가톨릭 기관들에서 3677건의 미성년자 성학대 사건이 있었고, 독일 모든 성직자 중 약 5퍼센트가 가해자로 고발되었다(National Catholic Reporter, 2018.09.12). 이후 이 보고서와는 별개로 2022년 1월 뮌헨 대교구에서 1945-2019년 사이 대교구 안에서 있었던 성학대 사건과 그 처리 문제를 정리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거의 1900쪽에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497명과 학대자 235명을 확인했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 보고서 발표자들은 2010년까지는 이 문제를 다루는 교회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Catholic News Here & Now, 2022.01.21). 독일 교회사상 전대미문의 이 사태로 독일 교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성직자와 교회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독일식 교회개혁 기획인 ‘시노드의 길’(Synodal Path)을 추진 중에 있다.

호주 교회도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학대로 흔들리고 있다. 2013년 호주 정부는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왕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했다. 2017년 2월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대부분의 성학대가 교회에서 일어났으며 1950-2010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가톨릭 사제 중 7 퍼센트가 학대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아동 성학대 의혹 사건 4444건이 교회 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일부 교구에서는 성직자의 15퍼센트 이상이 가해자로 보고되었다. 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조지 펠(George Pell) 대주교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를 기각한 뒤 2020년 석방되었다(Al Jazeera, 2021.10.05).

프랑스 주교회의는 2018년 ‘교회 내 성학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과거 교회 내 성학대 문제를 조사해 왔으며 2020년 10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교회에서 지난 70년간 약 33만 명의 아이가 성학대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80퍼센트는 소년이다. 또한 성학대를 저지른 자들 대부분이 사제로 약 3000명이며, 가톨릭 당국은 이를 지난 수십 년간 ‘체계적 방식’으로 은폐해왔다고 보고했다(Catholic News Here & Now, 2020.10.06).

아일랜드 교회에서 대규모 성범죄가 보고되고 이어 고발된 것은 수십 년 전이다. 1970-1990년 거의 15000명이 성적 학대의 피해자가 됐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몇몇 주교와 성직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2009년 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1930-1970년대에 가톨릭이 운영하는 고아원과 학교기관에서 아동 성학대가 널리 퍼졌으며 이를 은폐했다고 보고했다. 2011년 성학대와 관련해 신랄한 교회 비판적인 보도가 있는 뒤, 바티칸은 당시 아일랜드 총리가 사제들의 성적 학대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한 후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다(Al Jazeera, 2021.10.05).

이외에도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와 아시아의 인도, 필리핀, 한국 등지에서도 성학대 및 은폐 문제가 불거졌고 관련 사제의 구속 또는 면직, 주교의 사퇴 등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가톨릭 교회에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세속 사회의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 있고 담당 주체가 다른 데 반해 교회는 이 모두가 성직자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성직자가 아동이나 여성을 성폭행해도 이를 심판하는 이들 역시 성직자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범죄’(crime)가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죄’(sin) 차원에서만 다루어진다는(UCA News, 2022.04.26.). 권력의 독점은 교회내 비판세력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견제와 비판(check and balance)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이것이 제도화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 되어 왔다. 더욱이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신학조차 그것의 생산, 유통, 소비를 성직자가 독점함으로써 공동선 또는 공공선을 위한 담론이 아니라 성직자를 위한 교회내의 담론으로만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성학대 사태와 은폐는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공공선을 거스르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등장한 해방신학이 제기한 ‘가난함의 윤리’나 1980년대의 페미니즘이 가부장적 가톨릭 교회에 던진 윤리의 도전보다도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교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강조나 공공선 추구는 교회개혁이라는 내적 과제의 수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III. 가톨릭 사회교리와 아시아 공공신학의 공적 면모

1. 가톨릭 사회교리의 공적 면모

앞서 공의회 문헌에서 보았듯이 사회교리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왔고 시기마다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여기서는 사회교리의 중심 흐름을 공동선 또는 시민성과 관련해서만 선별해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그 공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³⁾

가톨릭 사회교리의 시작은 교황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1891)부터다. ‘노동현장’이라고

불리는 이 회칙은 19세기말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던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교회가 처음이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문서이다. 레오 13세는 1항에서 “교회의 선익과 공공선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 ‘인간의 자유’,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른 국가 조직’ 등에 관한 회칙들을 반포했던 전례에 따라 …… 노동자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밝힌다. 회칙 여기저기서 물질적 재화가 공동의 것이므로 이를 나누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한편, 그렇더라도 국가는 사유재산권을 폐지할 수는 없고 다만 재산의 사용을 규제하고 공동선과 융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다(16, 18, 33항: 22, 25, 39). 이 회칙은 후임 교황들에 의해 「40주년」, 「80주년」, 「10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100여 년에 걸쳐 재조명되어 노동문제와 더불어 각 시기의 주요 사안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담아 출간되었다.

레오 13세와 비슷하게 교황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기 전에 낸 회칙 「어머니요 스승」(1961)에서 공동선과 시민성을 강조한다. 그는 공동선 개념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완성을 더욱 충만하게 더욱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들을 포함하는”(65항: 184) 것으로 본다. ‘모든 사람들의 공동선을 증진하도록 국가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37항: 175)이며 ‘적정 임금과 이윤의 결정도 개별 국가나 전 세계 공동선에 부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78, 81항: 188). “가톨릭 시민의 역할”(Role of Catholic Citizens)이라는 소제목을 단 182-184항에서 그는 “저개발 국가의 가톨릭 신자들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기 역량을 다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182항: 215)고 치하하고, 또 가톨릭 신도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민족들의 진정한 발전을 열렬히 촉진하고 시민 문화에 구원의 힘을 불어넣어”(184항: 216) 주고 있는 데 대해 갈채와 감사를 보낸다고 밝히고 있다. 요한 23세에게 가톨릭 시민은 그가 말한대로 시민으로서 나라 발전을 위해 자기 역량을 다함과 동시에 진정한 발전을 위해 시민 문화에 구원의 힘을 불어넣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이는 본고의 중심 논제인 ‘좋은 종교인은 좋은 시민’이라는 기본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으며, 이미 공의회 전의 문서에서 이러한 ‘가톨릭 시민 정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종교적 시민’으로서 ‘가톨릭 시민’은 급조된 개념이 아니라, 이 문서에서 공의회로 또 공의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문헌들로 이어지는 가톨릭 사회교리 전통에 굳건히 자리 잡은 명제이다.

요한 23세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헌인 「지상의 평화」(1963)에서는 공동선과 국가권력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 문서는 “공동선의 본질적 요소”(Essentials of the Common Good)이라는 소제목 아래 이 본질적 요소에는 각 민족의 고유한 여러 특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그렇다고 그 특징들이 공동선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공동선의 본성상 모든 시민은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들의 직책에 따라 공동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공권력은 “정의와 공평을 고려하면서도 때로 사회의 더욱 약한 사람들에게 좀 더

3) 이후 인용하는 문서는 『교회와 사회-사회 교리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에 실린 교황들의 회칙, 훈령, 권고 등이며 각 문서의 이름과 항, 쪽수만 표기한다.

주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공동선이 균질적으로 모든 이를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약한 이’를 더 배려한다는 일정한 ‘우선성’을 보여준다. 이 우선성은 ‘모든 이를 위한’ 공공선에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공공선을 맥락성이 갖는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 많은 이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요한 23세를 이어 공의회를 끝까지 완수한 교황 바오로 6세는 회칙 「민족들의 발전」(1967)의 “발전은 평화의 새 이름이다”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결론 부분에서 공동선, 정의, 평화를 함께 언급한다. “우리가 빈곤과 부조리를 거슬러 싸우는 것은 결국 인간의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내지 윤리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 인류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평화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질서, 더욱 완전한 정의를 인간 사이에 꽃피게 하는 질서를 따라 하루하루 노력함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이다.”(76항: 444) ‘연대’(solidarity)의 회칙이라고 알려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회적 관심」(1987)에서 공동선, 정의, 평화의 관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온 인류의 공동선에 대한 관심에 의하여...모든 이의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발전을 위한 배려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에서는 평화가 가능하며 인간들 사이에 더욱 완전한 정의의 결실로서 그 평화가 가능하다.”(10항: 766)

위에서 언급한 선임 교황들의 공동선과 시민성에 대한 생각은 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계승되고 확장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2013)에서 ‘공동선과 사회평화’라는 부제 아래 공동선과 평화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모든 형제들』(2020)에서는 보편적, 세계적, 국제주의적 시각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실천적 대화’를 제안한다. 2015년에 발표한 『찬미받으소서』에서는 ‘공동선 개념의 지구적 확장’을 꾀한다. 『찬미받으소서』 18항에서 프란치스코는 공동선을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발전”과 동일시한다. 이것이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의 부제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이며 또 내용에서도 1장을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달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곧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류 공멸의 위기감 속에서 공공성은 이제 인간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전체, 생태계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시민성 또한 전 피조물을 돌보는 ‘지구적 시민성’으로의 확장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아시아 공공신학과 가톨릭 시민

종교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공공신학, 특히 아시아 토양에서 나온 아시아 공공신학이 종교 시민성 또는 가톨릭 시민성 담론을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론적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그 공헌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아시아 공공신학은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이 현실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시아 상황에서 신학의 역할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학과 차이가 있고 또 서구의 공공신학과도 결이 다르다. 아시

아 공공신학은 공공신학 일반과 비슷하게 신학을 본성이나 특성보다는 기능의 측면에서 다루면서 그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둔다. 그런 점에서 공공신학은 신학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해방신학과도 비슷하지만 ‘민중’이라는 계급에 한정되지 않는 데서 해방신학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서구 공공신학을 한국 가톨릭계에 소개하고 탐구해온 연구자로는 정희완이 유일하다. 그는 남미의 해방신학, 미국의 공공신학, 유럽의 정치신학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사회참여 신학’으로 부르면서 이들 신학은 공적 특성을 지니며 해방을 지향하고 따라서 정치적이라고 설명한다 (Jeong, 2011: 162-163). 그는 한국 개신교가 ‘한국 개신교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일 수 있는 신학적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토착화 신학, 민중신학, 또 최근에는 미국의 공적 신학을 받아들여 한국의 공적 신학을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아직 신학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톨릭 교회가 사회참여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사회적 실천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Jeong, 2011: 185). 이런 문제의식을 아시아 차원으로 확대해 ‘아시아 공공신학’을 주창한 펠릭스 윌프레드 (Felix Wilfred)는 2010년경부터 공공신학 관련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묶어내면서 이를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인도 출신의 가톨릭 사제인 그는 ‘Asian Public Theology’(2010), ‘Theology to Go Public’(2013), ‘The Oxford Handbook of Christianity in Asia’(2014), ‘Christians for a Better India’(2014), ‘Theology for an Inclusive World’(2019) 등을 출간했으며, 특히 40여 명의 아시아 신학자 및 종교학자 또 다방면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2014년에 출간한 이 handbook은 아시아 공공신학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Christianity’라는 반년간 학술지를 창간함으로써 아시아 공공신학의 토대를 강화하고 제도를 체계화했다. 여기서는 최근 국내에 번역된 그의 책 ‘Theology to Go Public’(『아시아 공공신학』, 2021)을 중심으로 문제의식과 주장하는 바를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윌프레드는 이 책 서론에서 공공의 관심사는 신학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공공의 관심사는 또한 신학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공공신학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공적인 것’을 인도와 아시아에서 우리가 하는 체험의 맥락 속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자칫 이 공공적 성격이 중산층과 상층계급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맥락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중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이를 의미한다...“빈곤”이 공공의 문제이듯이 “이주”의 문제도, 또 “인신매매”나 “카스트”의 차별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공공의 문제를 “다종교 상황”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신학이 다루는 문제는 모든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선다(Wilfred, 2021: 12-13).

여기서 윌프레드는 공공신학을 우리가 체험하는 아시아적 맥락에 위치시켜야 한다면서, 그 맥락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중산층과 상층계급이기보다는 사회적 소외 계층임을 분

명히 한다. 소외된 계층을 특정하여 공공신학이 이들의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는 사실 해방신학의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이라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아시아적 맥락으로서 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이주, 인신매매나 카스트, 다종교 상황에서 제기되는 공공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은 고전적으로 ‘노동-자본의 투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분석만으로 이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며 따라서 지구화라는 현 상황에서 철저한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주창하는 아시아 공공신학은 해방신학적 지향을 갖지만 종교문화다원성과 주체의 다양성이라는 아시아 상황을 강조하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교분리 문제와 관련해 살피면, 우선 아시아 공공신학은 성스러움과 세속, 선과 악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성숙 이원론이 아닌 하나인 구원의 역사를 강조한다. 곧 구원사와 세상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 구원과 해방’을 제시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시아 공공신학과 ‘종교시민성’(religio-citizenship)이 만난다. 아시아 공공신학에서 구원사와 세상사가 하나이듯 종교성과 시민성도 이원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성해주는 통합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종교 전통은 서로 적대하지 않고 하느님의 구원과 해방 계획의 동반자가 된다.”(Wilfred, 2021: 60)는 아시아의 종교문화 다원성에서 그 일치의 토양을 찾아낸다. 아시아 신학의 이러한 통합적 특성은 고전적 신학이 성서와 전통을 신학의 자료로 삼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종교문화적 전통의 풍요로움을 신학의 자원으로 삼는다. 그렇기에 아시아 공공신학은 ‘공공 생활을 “위한” 신학’(theology “for” public life)과 ‘공공 신학’(public theology)을 구분한다(Wilfred, 2021: 63).

여기서 공공신학이 공공생활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신학이 이미 만들어 지고 공공생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체적 삶에서 형성되고 구성되는 귀납적 신학임을 밝힌 대목은 아시아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학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 또 역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회내 담론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윌프레드는 이것의 원인이 강력한 성직자 중심주의에 있다고 지적한다. 주로 성직자가 신학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고 또 성직자를 위한 교육에 쓰이는 현실 때문이며 따라서 탈성직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Wilfred, 2021: 65). 따라서 공공신학이 교회의 언어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성직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도 아울러 갖고 있다. 그는 아시아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공공신학이 시작되었지만 종교문화 다원적인 아시아 상황에서 종교와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Wilfred, 2021: 86).

공공신학 연구자 최경환은 『아시아 공공신학』이 아시아 공공신학 논의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해방신학과 탈식민주의 신학의 언저리에서만 저항 담론을 만들고 있어서 다소 아쉽다고 지적한다(News & Joy, 2021.12.17). 이런 비판과 더불어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이 또 있다. 곧 윌프레드가 아시아 공공신학이 서양의 공공신학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 것처럼,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이 책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인도, 또는 남아시아는 서양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거리만큼이나 다르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다. “삶을 구성하는 지배적 요인으로서 문화적 경향”(Wilfred, 2021: 78)이라는 말이나 “종교는 아시아에서 믿음의 체계나 교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 곧 길이나 여정으로 간주”(Wilfred, 2021: 79)한다는 주장은 과연 오늘 한국의 현실에 여전히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은 남아시아, 인도와 같은 정도의 문화적 규정력(cultural definitiveness)이 없고 또 종교가 삶의 방식이나 길로 여겨지기가 실로 희박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한국 교회의 공공성과 가톨릭 시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또는 동아시아적 공공신학이 필요하다. 이를 우리가 논의해 온 맥락에서 말한다면 종교시민성이라고 하더라도 인도와는 다른 토양과 풍토의 한국적 종교성과 시민성, 그것을 바탕으로 한 종교시민성 담론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IV. 가톨릭 시민교육의 가능성: 정의평화위원회와 우리신학연구소 사례

이 장에서는 가톨릭 사회운동의 이론적 근거이자 지침 역할을 한 가톨릭 사회교리를 어떻게 실천해 구현했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가톨릭의 운동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현 상황에 맞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와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이하 우신연)의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살핀다. 앞서 본 것처럼 사회교리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특히 노동, 인권, 인간발전, 생태 등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시각과 태도를 밝힌 폭넓은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다. 해방신학과 더불어 사회교리가 한국 교회의 사회참여에 이론적 지침이 될 수 있었던 근거도 이런 사회윤리의 실천적 성격에 기인한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사회교리에 대한 연구는 그 내용이나 수용방식, 또는 사회교리와 천주교사회운동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뤄져왔다. 여기서는 정평위가 개설해 운영해온 ‘사회교리학교’와 우신연의 ‘월례준세미나’를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식을 소개하고 ‘가톨릭 시민양성’ 또는 ‘가톨릭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신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상세계의 예기치 않은 이른 도래와 그 위기 국면에 적극 대응해 기존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전환한 ‘가톨릭 시민교육’의 한 사례로 제시한다. 과거 우신연의 교육 방식과 내용에 비해 최근의 교육을 종교기반 엔지오(Faith-based Organization, FBO)의 특징인 ‘비공식 교육’(Non-Formal Education, NFE)으로서의 가톨릭 시민교육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사회교리학교'⁴⁾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가난한 이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장려하고 가난한 지역과 민족들 사이의 사회정의를 촉진하라’(『사목헌장』 90항)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안에 따라 1967년 교황청 정평위 설립을 시작으로 각 지역 교회로 확산된 기원을 갖는다. 한국 정평위는 1969년 주교회의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이듬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70-1980년대 군부독재 시대에는 민주화에 앞장서 수많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특히 노동과 인권 문제 등의 사회현안 관련해 연대했다. 정평위는 2009년 용산 참사, 2010년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4대강 사업 반대, 2011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2013년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위안부’ 합의 사태 등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왔다(Catholic Times, 2020.08.30). 한국 교회 전체 정평위 역할도 맡고 있는 서울대교구 정평위는 “복음과 사회교리에 비추어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8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정평위 활동은 ‘사회교리에 입각한 실천지향적 연구’, ‘사회교리를 사회 전체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연구 결과를 모든 단체들에게 제공’, ‘정의, 평화, 인권, 교육 네 분야에 대한 관심과 관련 활동 수행’ 등을 포함한다. 이 네 분야는 다시 여러 주제로 나뉜다. 정의 분야는 사회정의, 노동, 경제, 환경 문제로, 평화는 전쟁, 군비축소, 국제안보, (가톨릭 교회에서 매해 1월 1일로 정한) ‘세계평화의 날’ 활성화 등에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권 분야에서는 인간존엄성의 수호를 강조하며, 또 교육 분야에서는 ‘평신도, 수도자, 사제, 신학생들에게 사회교리를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해 사회교리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힌다.

정평위는 교육분야 활동 목표로 사회교리학교 운영을 적시하고 있고 실제로 1995년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132차에 걸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몇 차례 교육 단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1995년-2005년까지 1단계는 ‘입문’과정으로서 10주 동안 교황들의 사회문헌을 학습하고, 2단계는 역시 10주에 걸쳐 ‘사회교리 기본정신과 원리’를 배우며, 3단계는 ‘실천’과정으로서 6주 동안 ‘한국의 사회문제를 사회교리에 근거해 관찰 및 실천’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뉘었다. 그 이후 2006-2011년에는 1단계, 2단계에서 주제편과 문헌편 각 10주씩, 실천편인 3단계는 8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입문과 중급을 통합해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나누고 13주차로 진행해오고 있다. 참가인원은 1차(1995) 277명과 118차(2017) 146명,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130차(2020)와 132차(2022)에는 각각 50명이 참가했다. 2003년(29차)부터는 ‘본당사회교리’를

4) 여기서 언급된 내용 대부분은 정평위 홈페이지(http://catholicjp.or.kr/edu_historys) 자료이며 인용처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밝혔다.

신설해 성당에서 사회교리 강좌를 개설했고 정평위에서 강사진을 조직해 파견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 인원은 회차별로 적게는 30여명에서 많게는 200명 이상인데, 후반부에 본당 사회교리가 활성화하면서 참가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교육 내용은 기본과정(8주 또는 13주)과 심화과정(6주)으로 나뉘며 전자는 정평위에서 제공

<표 1> 제130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교육일정(2021.9.6.-11.1)

<Table 1> Schedule of Basic Course of the 130th Social Doctrine School (Sept.6-Nov.1, 2021)

주차	월일	교육내용	강사
1	9/6	가톨릭 사회교리 개론	박동호 신부(이문동 성당)
2	9/13	사회교리의 역사적 발전	정수용 신부(가톨릭평화방송)
3	9/27	사회교리 교황 담화문(세계평화의 날 등)	박동호 신부(이문동성당)
4	10/4	인간과 인권	김녕 교수(서강대)
5	10/11	인간 노동	김시몬 신부(노동사목위원회)
6	10/18	경제 생활	김승연 신부(의정부 수도성당)
7	10/25	환경 · 생태계	백종연 신부(환경사목위원회)
8	11/1	정치 · 국제공동체	하성용 신부(정의평화위원회)

<표 2> 제121차 사회교리학교 심화(응용)과정 교육일정(2018. 1.8-2.12)

<Table 2> Schedule of Advanced Course of the 121th Social Doctrine School (Jan.8-Feb.12, 2018)

월일	주제	교육내용	강사
1/8	교회	사회현실에 대한 교회의 역할	박동호 신부(이문동 성당)
1/15	공공권위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목격자들(백남기 형제 물대포)]	김덕진 사무국장 (천주교인권위원회)
1/22	민영화	의료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정형준 정책국장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1/29	환경	제주 제2공항, 석포제련소	장하나 팀장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2/5	노동	비정규직의 확산	김혜진 정책팀장 (장그레살리기 운동본부)
2/12	인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인권	김선실 공동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료식(졸업증 수여)	
		동문들과의 만남	

하는 교재 「가톨릭 사회교리 주제편, 문헌편」을 바탕으로 사회교리의 중심주제와 주요 문헌을 교육한다(<표 1> 참조). 곧 사회교리가 무엇인지 또 근본 원리와 그것의 사회적 상관성을 다루는 한편 앞서 언급한 주요 사회교리 문헌들을 가르친다. <표 2>에서 보듯이 심화과정은 사회의 여러 문제, 이를테면 교회의 역할, 공권력, 민영화, 환경, 노동, 인권 등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시사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육 형식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사제가 기본과정의 강의를 맡는 데 비해 심화과정은 강의 주제와 관련된 학자, 활동가, 사제 등 성직자를 포함해 전문가들이 맡는다.

정평위는 사회교리학교 이외에도 ‘교회와 세상’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현안을 다루었다. 이를테면 2021년 4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자, 시민’이라는 주제로, 2022년 4월에는 ‘기후 위기 시대와 가톨릭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와 세상’ 각각 21회와 23회 강연회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에는 ‘언론개혁: 언론의 상업성과 공영성’을 주제로 사회현안 자료집을 발행해 교회의 대사회적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해 신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실 민주화를 위한 정평위의 노력은 한국 정평위가 창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돼 왔으며 이것이야말로 정평위가 사회 민주화와 민중의 공익,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헌한 주요한 활동이었다. 정평위는 한편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면서 동시에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신자요 좋은 시민’이라는 가톨릭 시민의 덕목을 교육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우리신학연구소⁵⁾의 ‘월례 줌세미나’

우리신학연구소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천주교 대표 평신도연구소’로서 “1994년 평신도 신학운동을 지향하는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설립한 가톨릭 평신도 연구소”라고 소개한다. 당시 우신연은 평신도 신학자로서 양성되고 활동하려는 가톨릭 청년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지지하는 평신도, 사제, 수도자 및 수도회와 운동단체 140여 개인과 단체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자’해 설립하였다. 우신연은 ‘교회쇄신과 사회복음화’라는 공의회 정신에 따라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충실하게 실현하는 길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로 활동해왔다.

먼저 ‘평신도의 소명과 역할에 관한 신학 연구와 다양한 평신도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우신연이 ‘평신도의 신원과 정체성’을 강조해온 것은 한국 천주교회의 뿌리가 평신도와 이들의 신심 및 활동에 기원함을 기리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교회쇄신 내지는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우신연의 존재이유가 한국 교회의 강고한 성직자 중심문화 또는 성

5) 아래 인용된 우신연 소개와 프로그램은 연구소 웹사이트(<http://wti.or.kr/woorith>)에 기록된 내용을 이 글의 목적에 따라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직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평등한 공동체’(egalitarian church), ‘공동협력적 교회’(synodal church)를 건설하는 데 있음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우신연은 제도교회와 성직자중심주의를 비판하는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적, 사목적으로 구체적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 왔다. 다시 말해, 가톨릭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사목 모델 연구를 통해 함께하는 교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활동에 힘써왔다. 이와 관련해 “교회와 세상 안에서 깨어 사는 가톨릭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왔다. 또한 우신연은 ‘다른 종교인과의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종교,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해왔다.

우신연 활동 목표에서 보이듯 평신도 신원에 대한 강조는 그 기원으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가 아니라 성직자중심주의에 대척점에 위치시키면서 한국 교회의 공적 역할을 채근함과 동시에 변화의 담지자로서 이제 가톨릭 시민 양성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과정에 있다. 이런 맥락에

<표 3> 월례 줌세미나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2020.12-2022.5)
<Table 3> Schedule and Contents of Weekly Zoom Seminar (Dec. 2020-May 2022)

번호	날짜	교육내용	강사
1	12/15	부서지고 나누며 다가가는 그 몸	조민아 교수(페미니스트)
2	21.1/20	젊은이들은 왜 떼제로 가나?	신한열 수사(떼제 수도회)
3	2/24	코로나19 1년, 본당은 어떻게 살았을까?	박문수 박사(종교사회학)
4	3/24	‘진짜 사나이’는 왜 사는 것이 힘들까?	김정대 신부(예수회)
5	4/28	팬데믹 시대, 본당의 새로운 길	김민희 신부(대전 사목기획국장)
6	5/27	인공지능은 편견이 없는가?	유정원 박사 (종교학)
7	6/30	많던 청년은 어디에? 교회의 청년 현실	이미영 소장 (우리신학연구소)
8	7/14	혐오/차별 극복-새로운 휴머니즘과 종교	박정은 수녀(홀리네임즈대학)
9	9/28	팬데믹 시대의 삶과 신학	정희완 신부(신학자)
10	10/25	이주 노동자 성적 학대	Erlinda Joseph 활동가 (국제가사노동자연맹)
11	11/24	교회의 여성리더십과 교회개혁	Christine Schenk 수녀 (페미니스트)
12	22.1/25	차별금지법과 가톨릭교회	박상훈 신부 (예수회)
13	2/22	우리 안의 또 다른 차별: 이슬람	Abu Massim Abdul Yekeen 경북대 이슬람 학생 대표
14	3/29	우리와 같이 사는 이주민 이야기	이진혜 변호사
15	4/19	교회와 장애인 차별	나종천 선생(시각장애인)
16	5/31	성소수자와 그 부모 이야기	홍정선 선생(성소수자 부모모임)

서 월례쥬세미나는 가톨릭 시민양성을 위한 프로그램(<표 3> 참조)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 월례쥬세미나는 몸, 청년, 코로나와 교회생활, 인공지능, 가부장주의와 남성, 혐오와 차별, 이주노동자, 교회내 여성리더십, 차별금지법, 장애인, 동성애 등 주제의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강사 구성에서 남녀 성비(gender balance)가 절반씩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평신도가 다수이기는 하나 성직자와 수도자가 모두 참여하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전체 구성원 사이의 조화와 협력의 정신을 잘 드러낸다. 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표 4>에서 보이듯 우신연은 종교기반 엔지오의 특성을 잘 살린 온라인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우신연은 월례쥬세미나 말고도 다른 형식의 교육과 토론회 등을 통해 가톨릭 신자에게 교회와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표 4> 참조).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월례세미나가 1회로 기획된 데 비해 강독회 등은 4-10회의 비교적 장기 교육의 형식을 띤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동남아시아 민주화를 위한 1, 2차 연대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주로 강사에게 의지하는 강좌 형태거나 교재를 중심으로 강독하는 형식이어서 나눔이나 토론이 월례쥬세미나 정도로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장 최근 실시한 ‘아시아 공공신학’ 세미나는 다소 전문적이고 무거운 내용의 교재 중심으로 진행했는데도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교육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른 점은 강독회를 교재에 대한 학습으로만 끝내지 않고 현실과의 관련성을 여러 각도에서 제기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자신의 관심과 경험 안에서 교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표 4> 강좌, 강독회와 토론회 일정 및 내용 (2021.1-2022.4)

<Table 4> Schedule and Contents of Lectures and Open Forums (Jan. 2021-April 2022)

일정	교육내용	강사
21.1/14	신앙과 사회 주제 온라인 강좌 (4주)	소희숙 수녀(베네딕토회)
4/9	‘세계정의’와 ‘모든 형제들’ 강독회 (10주)	황경훈 연구원(우신연)
5/1	마두동성당 견진강좌 (6주)	박문수 외 5명(우신연)
8/26	‘공동합의성’과 세계주교시노드 (6주)	경동현 외 3명(우신연)
10/18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총회 준비 특강	이미영 외 1명(우신연)
10/20	화정동성당 견진강좌	유정원 외 3명(우신연)
3/17	미얀마 군부쿠데타 관련 긴급 토론회 (당일)	미얀마 현지 활동가 3명
12/7	미얀마, 홍콩 민주화 연대 토론회 (당일)	미얀마, 홍콩, 한국 활동가
22.4/4	‘아시아 공공신학’ 연구 세미나 (6주)	황경훈 연구원(우신연)

사회교리학교와 월레쥔세미나 사례는 형식면에서 과거에는 주로 대면으로 진행해왔으나 지금과 같은 역병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또 미래에는 대면과 비대면의 혼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강사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는 ‘강의식’ 교육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뤄져 왔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참가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토론식’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성, 개방성, 공론장 형성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켜 보자. 정평위의 사회교리학교가 ‘가톨릭 시민교육’을 공식적인 교육 목표로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를 수행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사회교리학교의 교육이 교회 담장 안에서 신도나 교회 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확장해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공공선’에 대한 교육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교리학교의 교육은 신자를 대상으로 주로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한’ 교육에 치중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사회교리 교육에서 기본과정이 응용과정보다 훨씬 더 많다는 단순한 통계상의 이유뿐 아니라 심화과정이 ‘응용’과정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교리의 근본적인 신학적 입장은 의도했던 아니든 사회교리나 신학 또는 복음을 사회와 세상에 ‘적용’ 내지는 ‘응용’하는 것이지, 반대로 사회라는 ‘타자’가 교회와 신앙을 변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허락하는 그러한 의미의 ‘상호 변화’(mutual transformation)는 보이지 않는다. 곧 세상 변화를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사회의 일부인 교회도 형성되는 것’이라는 유기체적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펠릭스 월프레드, 2021: 63). 따라서 사회나 타자가 복음이나 신학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비타협적인 이원론이 그것의 원인 또는 배경이 되고 있는 듯하다. 정평위 교육이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서 확장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교회 조직’이라는 태생적 특성과 더불어 교육의 배경이 되는 철학과 신학의 보수성이 가톨릭 시민성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평위는 주요 도나 시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둔 교구와 전국에, 또 나아가 세계 전체와 로마 교황청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자료를 손쉽게 구하고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연대를 맺을 수 있는 등 잘 확립된 제도를 통해 다양한 가톨릭 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우신연의 월레 쥔세미나는 다루는 의제의 다양성과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를 다루는 시대적 민감성의 관점에서 ‘좋은 신자 되기’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좋은 시민 되기’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동시에 수행해오고 있다고 보인다. 교육 방식과 관련해서도 과거 우신연이 주로 사용한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강의와 토론을 동일한 비중으로 삼는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지속성이나 더 전문적인 교육(higher education)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안정성의 문제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는 우신연 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다른 엔지오도 직면한 문제로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주요한 과제라고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일 교회의 ‘가톨릭 성인교육’의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

대하고 촘촘한 교육 체계는(Kim, 2018: 92) 우신연처럼 ‘비공식 교육’(NFE)을 담당하는 조직과 정규 교육기관의 협조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양성, 개방성과 더불어 공론장 형성 가능성도 가톨릭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다. 두 교육 사례와 관련해 말한다면, 공론장의 기능 가운데서도 개인과 교회 및 사회, 또 교회와 사회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이를 전체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 두 교육 주체에게 이제 교육은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의사소통의 장이자 그곳에서 나온 목소리를 교회 전체, 또 타종교와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매체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월례줌세미나는 단발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교회 언론을 통해 뉴스 기사로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요약해 전달하고 또 칼럼을 통해 그 의미를 신학적, 종교학적, 사회학적으로 해석해 더 많은 다중에게 전파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공론장 기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를 떠나 주목할 만한 방법론으로 보인다.⁶⁾

V. 맺음말

주지하는 것처럼 한국 가톨릭 교회는 1960-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민중의 공익과 공공선 신장에 의미 있는 공헌을 했다. 실로 가톨릭 교회는 민주화 열망을 실현할 물꼬를 여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농민, 노동자, 빈민 등의 기층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였고 시민 사회는 이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다원주의적 종교문화가 현실이 되어버린 시대를 맞아 전과는 다른 더욱 다양하고 중층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띠는 시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민중민주 운동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가톨릭 내 운동세력도 구심을 잃게 되었다(Hwang, 2021: 372-373). 따라서 가톨릭 운동은 이제라도 민중의 생존권 확립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면면을 적극 계승하고 이를 ‘포스트 민주화’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방식과 교육이 필요한가를 실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한 관심사에서 이 글은 21세기 한국 현실에 제대로 응답하는 가톨릭 교회의 공적 역할과 그것을 추동하는 주체로서 가톨릭 시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정평위와 우신연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전망하고자 했다. 이제 그 방향과 관련해서 짧게 언급하는 것으로

6) 최근 월례줌세미나에 관하여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에 실린 기사와 연계된 칼럼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수나, “차별금지법을 가뒀버린 교회의 성 윤리” 2022.1.26. 황경훈, “차별금지법 반대, 무엇이 두려운가” 2022.2.7.; 배선영, “장애인 사목, 본당에서 일반 사목이 돼야” 2022.4.20. 황경훈, “더 작은, 더 많은 목소리로 교회 개혁을” 2022.4.29.

글을 마무리 하겠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평위는 교구-전국-세계-교향청이라는 잘 확립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교육과정에 조금 더 과감한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아직 교육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주제들, 이를테면 사회적 약자를 교회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특히 교회내 여성리더십,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교회쇄신 또는 개혁 등을 다뤄볼 수 있다. 그동안 정평위 교육이 세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복음을 세상에 ‘적용’시키는 것에 치중하여 왔다면, 이제는 ‘좋은 신자’에서 ‘좋은 시민’으로 나아가도록 전격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분히 교회 중심적이고 성숙 이원론적 경향이 있는 정평위의 세계관, 곧 신학적 관점을 유기체적이고 진화론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가난한 이들이 우리를 복음화하도록 하자(let ourselves be evangelized by them)”(Catholic News Here & Now, 2021.12.15)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은 적절하고 유용한 지침을 준다고 보인다. 여기서 가난한 이들은 ‘타자’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이들로서 이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교회와 신앙을 변화시키고 바꾸도록 하자는, 전에는 교회기반 사회운동 조직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회나 신앙이 사회를 변화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가르침도 사회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진보적 신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 시민 교육과 관련해 정평위에게 다른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런 세계관의 전환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신연은 상당 기간 동안 모든 교육을 공론장 형성과 거기서 논의된 것을 전체 교회와 사회에 전달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성직중심주의가 여전히 강고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또 그것의 결과로 토론 문화의 부재나 의사소통 구조조차 마련되어 있는 않는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작은 공론장 만들기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 하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뒤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현지 활동가들을 연결해 연대 토론회를 개최한 데서 증명되듯이 국내외 시민단체와 교회개혁 그룹과 연대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한편 제도적 취약성을 극복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해 먼저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와 ‘동아시아 복음화연구소’, ‘교회사 연구소’ 등 우신연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연구소와 협력해 교육 플랫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신연 단독으로 조직하기 어려운 더 다양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도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시나 구의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한 제도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중의 과제를 지속적이고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간다면 가톨릭 시민 교육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Al Jazeera (2021.10.05). The global scale of child sexual abuse in the Catholic Church, Retrieved May 10, 2022 from <https://www.aljazeera.com/news/2021/10/5/awful-truth-child-sex-abuse-in-the-catholic-church>.
- Catholic News Here & Now (2020.10.06.). French Church, 330,000 Victims of Sexual Abuse for the Past 70 Years. Retrieved April 28 from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79>.
- Catholic News Here & Now (2022.01.21.). Vatican Examines Sexual Abuse Report Pope Benedict XVI Involved, Retrieved April 28, 2022.04.28. from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79>.
- Hwang, K. H. (2021). A Study of Korean Catholic Peoples' Movements. *Catholic Theology*, 39, 349-384.
- Hwang, K. H. (2021.12.15.). Appointment of New Head of Archdiocese and Church Reform [Catholic News Here & Now]. Retrieved May 10, 2022 from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
- Jeong, H. W. (2012). A Reflection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 of Theology toward A Korean Participatory Theology. *Theological Perspective* 177, 146-195.
- Jo, D. Y. & Hong S. T. (2013). Social Composition of Publicness and Its Historical Typ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6, 9-43.
- Jo, H. J. (2022). A Study of the Compatibility of Citizenship and Religiosity, and Implication of Christian Citizen Education. *Theological Perspective*, 216, 45-78.
- Kim, N. H. (2018). The Exploration of the Necessity of Korean Catholic Adult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7, 79-102.
- UCA News, (2022.04.22.). Synodal talks meaningless without fundamental changes: theologian, an Interview with Felix Wilfred, Retrieved May 5, 2022 from <https://www.ucanews.com/news/synodal-talks-meaningless-without-fundamental-changes/97017>
- Wilfred, F. (2010). *Asian Public Theology- Critical Concerns in Challenging Times*. Delhi: ISPCK.
- Wilfred, F. *Theology to Go Public*. 황경훈 옮김 (2021). 아시아 공공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 Yeonhab News (2018.10.12.). Pope, Accept of Resignation of Washington Archbishop Suspicious of Cover up of Sexual Abuse. Retrieved April 30, 2022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2177500109>.

- Zita B. F. (2018.09.12.). Leaked German report shows 3,700 cases of abuse of minors in 68 years, Retrieved May 10, 2022 from National Catholic Reporter.
<https://www.ncronline.org/news/accountability/leaked-german-report-shows-3700-cases-abuse-minors-68-years>.
- 성석환 (2019). 공공신학과 한국사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Translated in English) Seong, S. H. (2019). *Public Theology and Korean Society*. Seoul: Saemulgyeol Plus.
- 이용주 (2020). 세계관 전쟁-근대 중국에서 과학신앙과 전통주의 논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Lee, Y. J. (2020). *War on Worldview: Debate of Science Faith and Traditionalism in Modern China*. Seoul: Publishing House of Seonggyungwan University.